

주간 농업 · 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 개편

거시경제 동향

2013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해외 농정 이슈

미국, 최근 2년간 재해복구비 620억 달러 지출 등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잠정결과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김장채소 공급 과잉에 대비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김장채소 생산량 전망

○ [김장채소] 대부분 평년대비 생산량 증가 전망

- (원인) 태풍 피해가 적고 기상여건 등의 생육환경이 양호함에 기인

○ [가을배추] 1,554~1,623천 톤, 평년(1,462천 톤)대비 6~11% 증가

- (공급) 출하가 지연된 고랭지배추 물량도 많아 평년 대비 122~191천 톤 공급 과잉 예상

○ [가을무] 590천 톤, 평년(590천 톤)대비 2% 하락

○ [고추] 111천 톤, 평년(106천 톤)대비 5% 증가

○ [마늘] 412천 톤, 평년(325천 톤)대비 27% 증가

□ 수급안정 대책

○ 김장채소 공급과잉에 선제적 대응, 시장심리 조기 안정을 위해 공급조절과 수요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수급안정 대책추진

1) 공급조절

<가을배추무>

○ [계약재배 확대] 2012년 49천 톤 → 2013년 100

- 김치공장, 급식업체, 군납 등 대량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 위기 시 수급 안정용으로 활용

○ [위기단계별 수급안정대책 마련] 경계, 심각 단계

- (경계) 유통협약 체결,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30천 톤(자체처분)

- (심각) 단계적 시장격리(목표량:80천 톤) 실시

○ [저장비축] 가을배추 7천 톤

- 올 여름에도 봄고랭지 배추(6천 톤) 비축하여 고랭지배추 수급불안 대응

〈배추 공급조절〉

단위: 천 톤

공급과잉	공급조절(117)			수요확대(45)		소계	과부족
	자체 폐기	시장 격리	저장 비축	소비 촉진	수출 확대 등		
122~191	30	80	7	43	2	162	-40 ~ +29

〈고추마늘〉

○ [정부물량 공급을 자제] 시장 기능을 존중하여 농협 및 민간 보유물량을 중심으로 공급

- (마늘) 정부보유물량(수입 2천 톤, 비축 12천 톤)은 12월까지 시장격리
- (고추) 최초로 경계경보 발령하고 건고추 수매(5,800톤) 조기완료 추진, 심각 단계 시 가용예산(160억) 내에서 추가 수매 검토

2) 수요확대

- [김장재료 저가 공급] 김장시장 개설 및 직거래 장터 운영
- [소비촉진] 소비자 단체가 연계하여 대국민 김장 캠페인 운동 전개
- [수출확대]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10% → 15), 해외 판촉행사 홍보지원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 [간접적인 소비확대 유도] 푸드뱅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김치기부(농협, 5만 포기), 연말연시 민간기업의 김치기부 참여 독려

3) 수급상황 관리

- [김장채소류 수급관리 및 가격 모니터링]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반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운영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aT, 농경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생육 및 출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 [원산지 표기 지도] 김장철 원산지 단속 강화

주요 농정 이슈_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 개편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개편 - 인증기관 형사처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목적]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 발생과 관련,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개편방안」 마련·추진
- [기본방향]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 주요 내용

- [인증기관 지정취소, 형사처벌] 중대한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형사처벌)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관련 금품수수 등 있는 경우
- [인증업무 민간이양 연기] 당초 '14년으로 계획되었던 인증업무 민간 이양을 연기하며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확보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이양 추진여부시기 재검토
- [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선] 공공성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정
 - (현행)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 → (개선)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 (현행) 주식회사 등 영리위주 기관 → (개선) 사단법인,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관리·감독 강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 시행횟수 연 1회 → 2
- (행정처분 강화) 인증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성 확보**

-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교육 이수 시 증서 발급
- 기존 인증심사원도 보수교육 시 시험을 거쳐 자격 재부여
-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시 심사원 자격 취소

○ [인증수수료등 지원방식 개선] 지자체의 친환경 인증수수료, 농자재비 등 지원방식을 개선토록 하여 인증신청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

- (현행)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확산 차원에서 인증신청농가에 인증수수료와 농자재 구입비 등 지원 → (개선) **지자체가 신청농가에 직접 지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증기관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하고 있어 부실인증 문제 발생할 가능성 내재

○ [시행] '13년 11월부터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조속히 실행

□ **양우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내용	
'13.10월~11월	특별조사(인증 품)	친환경 인증품 유통(백화점, 할인매장 등 판매장·취급장) 실태 ※ 소비자단체 참여
'13.11월~12월	특별조사(인증기관)	인증심사기준 준수여부, 인증신청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등 ※ 소비자단체 참여
'13.11.1~11.30.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13.12월~'14.1월	법률 개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14. 1월~3월	"	관계기관 의견조율 및 행정예고
'14. 4월~6월	"	국회 제출
'14. 6월~	"	법률개정 공포 시행

거시경제 동향

2013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2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3년 9월 무역지수**

○ [수출물량지수]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

- (농림수산물) 전년 동월대비 3.5%↑

○ [수출금액지수] 전년 동월대비 4.1% 하락

- (농림수산물) 전년 동월대비 8.1↓

〈수출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등락률〉

단위: 전년 동월대비, %

구분	물량지수				금액지수			
	6월	7월	8월	9월p	6월	7월	8월	9월p
총 지 수	-1.4	2.2	7.8	-2.4	-1.8	1.7	5.9	-4.1
농 립 수 산 품	-12.4	25.8	2.8	3.5	-21.1	7.4	-12.8	-8.1
공 산 품	-1.4	2.1	7.8	-2.4	-1.7	1.7	6.0	-4.1
섬 유·가 죽 제 품	3.2	1.6	0.2	-8.8	2.6	1.9	0.5	-8.2
석 탄·석 유 제 품	-12.2	-10.0	-1.4	-7.5	-6.7	-7.0	-6.3	-13.4
화 학 제 품	3.0	2.3	5.6	-2.7	3.6	4.9	7.0	-2.1
제 1 차 금 속 제 품	-11.1	-4.6	-6.6	-11.4	-19.0	-13.8	-15.7	-19.3
일 반 기 계 제 품	-2.7	-1.4	0.5	-11.5	-3.8	-2.1	-0.4	-12.1
반도체·전자표시장치	-3.4	7.7	7.6	4.1	-1.1	8.7	9.6	7.8
통신·영상·음향기기	9.4	27.1	27.5	12.1	3.4	21.6	23.0	8.3
수 송 장 비	-5.1	-3.4	25.9	-11.5	-4.0	-1.9	28.0	-9.4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수정됨.

○ [수입물량지수]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광산물 등이 감소하였으나 일반 기계, 전기및전자기기 등 공산품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

- (농림수산물) 전년 동월대비 12.5%↓

- [수입금액지수]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2.8% 하락
- (농림수산물) 전년 동월대비 12.4%↓

〈수입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동향〉

단위: 전년 동월대비, %

구 분	물량지수				금액지수			
	6월	7월	8월	9월p	6월	7월	8월	9월p
총 지 수	3.0	5.5	3.6	1.3	-2.7	3.4	0.8	-2.8
농 립 수 산 품	-3.9	2.4	-0.1	-12.5	-4.4	-0.6	-0.6	-12.4
광 산 품	0.5	-0.7	-4.0	-5.4	-6.6	-0.5	-5.7	-9.3
공 산 품	4.6	8.9	7.9	5.4	-0.5	5.6	4.4	1.1
섬 유 · 가 죽 제 품	4.2	13.5	11.7	9.8	5.5	16.2	14.2	12.1
석 탄 · 석 유 제 품	0.7	15.2	2.0	-0.3	-2.2	25.6	8.8	-2.2
화 학 제 품	3.4	5.3	-0.8	2.7	-1.6	1.7	-5.3	-1.8
철 강 1 차 제 품	-6.5	5.8	9.5	-6.2	-16.3	-6.8	-2.7	-15.9
비철금속및1차제품	2.1	4.9	12.2	6.3	-5.4	-1.0	4.6	-0.1
일 반 기 계	22.0	19.6	28.9	19.1	13.1	10.6	21.3	12.0
정 밀 기 기	-10.2	-5.4	-6.4	-2.1	-11.3	-6.8	-7.8	-3.9
전기 및 전자기기	12.1	11.8	12.0	8.6	7.3	7.4	7.9	5.1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수정됨.

□ 2013년 9월 교역조건지수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더 크게 내려 전년 동월대비 2.4% 상승
※ 수출상품 1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1단위 가격간의 비율로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
- [소득교역조건지수*] 순상품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0.1% 하락
※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가격변동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지표로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

예외 농정 이슈

미국, 최근 2년간 재해복구비 620억 달러 지출 등

1. 미국, 2011~2012년 재해복구비로 620억 달러 지출

□ 미국진보센터, 지난 2년간 미국의 재해구호 지출비용 분석

- 지난 9월 미국 진보진영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2011~2012년 지난 2년간 미연방정부가 지불한 자연 재해 구호비용을 주별 및 프로그램별로 정리한 보고서 발표
- [자연재해 손실액] 1,880억 달러
※ 지난 2년간 대규모 태풍, 홍수, 가뭄, 열파, 산불 등 약 25차례 자연재해 발생
- [자연재해 구호비용] 2011~2012 회계연도 사이 지불금액은 총 620억 달러로 미국농무부(USDA)가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 부담
- 특히, 작물보험 프로그램이 가장 큰 지출 차지(282억 달러 소요)
- [재해복구지원 수혜지역 순위] 2년 동안 텍사스가 약 52억 달러로 가장 많은 정부 재해구호 지불금 수령
- 그 외 일리노이, 노스다코타,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순

□ 기상이변 발생 빈도 증가 추세

- [대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 증가] 피해규모 10억 달러 이상 초래한 연간 대재해 발생건수는 1980년대 연평균 2건 미만에서 최근(2010~2012년) 9건으로 크게 증가
- (피해규모) 1980년대 연평균 200억 달러 → 최근(2010~2012년) 연평균 850억 달러

※ 자료: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13.9.11.), Reuters(2013.9.11.)

2. EU-싱가포르, FTA 최종 합의

□ EU집행위원회, EU-싱가포르 FTA 최종합의안 발표

- EU집행위원회, 9월 20일 EU-싱가포르 FTA 합의안 공표
 - EU-싱가포르 FTA 발효는 유럽연합 각국 및 싱가포르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 발효될 전망**
 - EU-싱가포르 FTA, ASEAN 국가 중 최초 FTA
- [EU-싱가포르 무역현황] EU와 싱가포르의 상품무역액은 2012년 기준 520억 유로, 서비스무역은 2011년 기준 280억 유로로 EU에 있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국
 - EU는 2012년 기준 싱가포르의 상위 2번째 무역 상대국
- [FTA체결에 따른 경제효과] EU의 대(對) 싱가포르 수출은 향후 10년간 3.6% 증가하여 약 14억 유로 증가 전망. 한편 싱가포르의 대 EU수출은 동 기간 10.4% 증가하여 약 35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¹⁾

□ 합의내용 및 중점사항

- [서비스 및 정부조달 분야] WTO 수준 이상을 서로 제공하기로 합의
 - 자동차나 전기전자제품, 특정한 환경기술에 대한 쌍방의 이중 시험 요구와 같은 무역에 관한 많은 기술적인 장벽 제거
 -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이상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 합의
 - 쌍방의 녹색성장을 자극하는 수단으로서의 FTA를 목표로 무역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항목(제 13장) 명시

※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2013.09.24.), Europa(2013.09)

1) 싱가포르 내 수많은 EU기업의 수출 포함.

3. OECD, FTA가 칠레 과일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신선과일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칠레는 **현재 약 60개국과 22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간 수출액) 칠레 전체 수출액의 93%, 농산품 무역은 85% 이상, 과일부문은 90% 이상
 - (협정 효과) 칠레 수출품의 관세는 평균 90% 이상 감소
 - ※ FTA하에서 전체 부문 상품의 평균 관세가 최혜국대우(MFN) 조건하 관세와 비교하여 3.2% → 0.31%로 감소(농산품: 12.7% → 1.47)

□ 칠레 과일 수출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 영향 측정

- [농산품 수출 6배, 수입 5배 증가] 농산품 수출입은 지난 20년간 상당히 증가
 - (주요 수출시장) 미국, EU, 일본 순, 가장 큰 수입시장은 메르코수르(MERCOSUR)²⁾ 지역
 - (주요 과일 수출품) 신선포도, 아보카도, 사과, 키위 등
-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양자무역 협정 체결국과 미체결국 간 무역 교역량 차이 분석한 결과 **자유무역협정이 칠레 과일 수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
 - ※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원용한 것으로 지역 간의 무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기본원리는 무역량이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 가격을 포함한 관세 1% 감소에 상응하는 특혜마진은 양자 간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비해 수출을 4.9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즉 **관세가 1% 인하될 시 무역량은 5% 가까이 증가**
 - ※ 특혜마진(preferential margin): 최혜국대우 관세와 특혜관세 간 비중 차이

※ 자료: OECD(2013.08.12.)

2)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 1995년부터 지역 내 모든 관세를 철폐(매일경제).

4. GRFA, 세계 각국 바이오연료 정책 연왕 발표

□ 세계재생연료연합, 62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연왕 정리

- 세계재생연료연합(Global Renewable Fuels Alliance, GRFA[※])은 지난 8월 바이오연료 정책을 채택한 세계 각국의 정책 현황을 지도로 표시
 - ※ 바이오연료 친화정책 채택을 촉구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의 65% 이상을 담당, 현재 44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
- 현재 **바이오연료 정책 채택국은 62개국**으로 미국,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신흥개발국의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
 - (**바이오연료시장 확대**) 바이오연료 수요가 하루에 백만 배럴 이상으로 최근 바이오연료시장이 각국의 정책도입에 힘입어 상당히 확대
 - (**바이오연료 친화정책 채택 목적**) 바이오연료정책 채택의 가장 큰 목적은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 및 석유수입 의존도 감소
 - (**EU**) 현재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전통 식량작물의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을 5%로 상한하는 정책 도입 여부를 평가 중에 있어, 향후 현행 ‘모든 운송연료에서 10%의 재생에너지 사용’ 정책 변경 가능
 - (**인도**) 근래 바이오연료 정책을 도입하여 현행 의무 혼합비율을 에탄올 5%로 설정하고, 향후 생산능력이 보장될 시 10%로 증가시켜 2017년까지 전체 연료의 2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할 계획
 - (**아프리카 10여 개국[※]**) 바이오연료 정책 채택
 - ※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모잠비크 등
 - (**한국**) 바이오연료 채택국의 하나로 현행 의무혼합비율은 바이오디젤 2.5% 사용

※ 자료: Global Renewable Fuels Alliance(2013.8.22.)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0월 21일~2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정부, 쌀 목표값 추가조정 나서

- 정부, 법률에 따라 산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안(80kg 17만4,083원) 추가 조정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절충 대안 모색[※]**. ▲농식품부…농가소득 보전 효과와 정부의 재정부담 한계 동시 고려. 쌀 직불제는 변동직불금 산출 때 고정직불금이 올라도 그 인상분만큼 변동직불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인데 이를 개선해 **고정직불금 인상의 순증 효과가 농가수취가격에 반영되도록** 목표가격 수준 상향 조정. 고정직불 인상에 따른 변동직불 개시가격 하락분 5,603원만큼 쌀 목표가격을 기존 정부안(17만4,083원)에 추가로 반영하면 **새로운 목표가격은 17만9,686원**이 돼 **농가소득보전 효과 기대**. 또한 이 같은 **목표가격 조정안이 수용된다면 고정직불금을 1ha당 100만 원까지 높이는 시기도 201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 적극 검토**. 다만 이 같은 목표가격 조정안은 **현재 검토 중인 대안 결정**
 - ※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존 목표가격 변경안 수용 불가 입장에 기인
- 자료 : 농민신문(2013.10.21.)

□ 수입쌀 보관·공매·유통 문제점 지적

- 김영록 의원, 10.17일,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수입쌀 보관·공매·유통 문제점 지적**.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수입쌀은 온도가 자동 조절되는 전국 18개 저온저장창고 보관**. 이에 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거나 군대·학교급식에 쓰이는 나라미는 전국 3,000여개 일반창고에 상온 상태로 보관[※]**. ▲**밥쌀용 수입쌀의 저가 공매로 국내 쌀값 하락 및 양곡회계 손실 발생**…국내산 도매가격 대비 수입쌀 공매 낙찰가격은 (2007년) 80.5% → (2008년) 38.2%,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36.6%·43.5%, 정부가 수입쌀을 도입 원가보다 낮게 공매하면서 당시 국내 쌀값 하락을 부채질, 3년간 양곡회계에 1418억 원 손실. ▲**수입쌀 둔갑유통 방지대책 마련 촉구**…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0년) 36건 → (2011년) 149건 → (2012년) 39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 공매에 참여할 자격이 완화된 이후 밥쌀용 수입쌀의 둔갑유통 판매 증가. 공매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위반업체는 수입쌀 취급 자격 영구 박탈 강조
※ 특히 바구미와 같은 벌레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고독성 농약 <에피험>으로 훈증처리하면서 안전성 논란 일기도

자료 : 농민신문(2013.10.21.)

□ 채소 7품목 최저보장가격 7~43% 인상

- 농식품부, 10.15일, 전국의 지자체와 농협·aT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노지 채소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7개 품목 최저보장가격 7.7~43.3% 인상. 15일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고추 기존 3,490원(600g) → 5,002원(43.3%), ▲겨울배추 76만 원(10a) → 93만8,000원(23.4%), ▲가을배추...60만8,000원 → 71만 원(16.8%), ▲당근 108만9,000원 → 126만5,000원(16.2%), ▲대파 99만3,000원 → 114만6,000원(15.4%), ▲고랭지무 64만4,000원 → 71만 4,000원(10.9%) 등

자료 : 농민신문(2013.10.21.)

□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농사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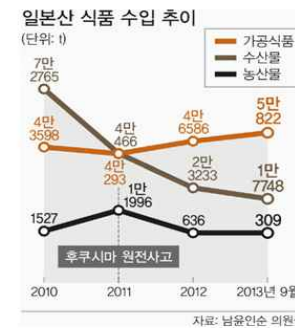
- 배기운 의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양성분조사' 완결보고서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27개 시·군 140곳 1억6,511만㎡의 농경지에 대한 토양화학성 살펴본 결과*, **적정범위(pH 5.6~6.5)는 6.1%에 불과, pH 6.6 이상인 과다 범위가 92.2%.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쌓아 만든 리모델링된 농경지의 대부분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토양인 것으로 확인.** 분강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구의 이화학적 특성은 일반 농경지 토양과 큰 차이가 있어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과 수량 확보를 위해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으로 과학적인 토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각 지구별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토양관리가 이뤄진 곳은 사실상 전무. 농민들 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방조해**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 (농어촌공사 입장) 극히 일부 농경지에만 극한된 문제

※※ 국립농업과학원이 1년 6개월 동안 실시 결과 전체 140곳 중 60곳의 토양에 문제점 발생

※ 4대강 바닥에서 퍼낸 깨끗한 흙으로 생산성이 높은 농경지 조성 취지. 4억 5,000만㎡의 토사 중 1억9,000만㎡를 전국 27개 시·군의 농경지 7,726.9ha에 쌓아 올렸으며, 농경지 높이를 2~3m 올려 인근 하천의 상습침수를 방지 하려는 게 주 목적. 정부는 기존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키울 수 있는 토지로 탈바꿈한다고 선전

자료 : 국민일보(2013.10.23.) / 한국농어민신문(2013.10.24.)

□ 원전사고 후 일본산 가공·원료식품 수입 증가



최근 3년간 일본 8개현 가공·원료 수입 상위 5개 기업

업체명	8개현 수입량	최종 수입일자
한국네슬레	1479t	8월22일
코스트코코리아	545t	8월27일
롯데	282t	8월26일
한국관광용품센터	53t	8월21일
해태제과식품	41t	8월27일

자료: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

- 10.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감, 남윤인수양승조 의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전인 **2010년과 2012년** 비교하면 일본산 **농산물 59.1%수산물 68.1% 수입**이 각각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은 오히려 **6.9% 증가**. 또한 정부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가공·원료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고 있는 기업은 한국네슬레, 코스트코 코리아, 롯데, 한국관광용품, 해태제과식품 순.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외 **일본산 가공식품과 식품원료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모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 주장

※ ex. 정부,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과 쌀 수입은 금지하고 그것들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품과 사케는 수입제한을 하지 않는 등 이중적

자료 : 경향신문·국민일보·내일신문·연합뉴스(2013.10.21.) / 세계일보(2013.10.22.)

□ 중국, 쇠고기 소비량 급증

- 농협경제연구소, 중국의 쇠고기 소비량 (2012년) 559만7,000톤, **20년 전인 1992년 172만9,000톤 이후 연평균 6.1%씩 증가**. 같은 기간 돼지고기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3.6%. 중국의 쇠고기 소비가 증가한데는 **소득증가로 육류 소비구조가 고급육 위주로 변하기 때문***. **중국내 쇠고기 소비자 가격도 지난 6월, 전년 동월대비 28% 상승**. 이런 가운데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도 크게 늘어** 지난 1~7월 총 16만3,209톤이 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배나 증가, 특히 7월만 2만8,308톤 수입해 2011년 연간 수입량을 초과. 따라서 중국의 쇠고기 소비량 급증하면서 **국제 쇠고기 가격 상승과 사료가격 인상요인 발생을 대비한 대책마련 필요**

※ 특히 쇠고기의 경우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샤브샤브나 불고기 등 많이 소비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0.23.)

□ 농약 '판매가격 표시제' 논란

○ 농약의 가격표시 방법을 놓고 논란

- 농약 용기에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돼 있지 않아 불편
- 판매상 따라 값 천차만별 농업인 불만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경제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해 농약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가격 표시
- 권장소비자가격표시 제도입 제기

[현재 농약은 판매가격표시제 적용 대상]

- (도입 취지) 소비자가격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책정해 놓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싸게 파는 부당행위 차단**, 판매상들 사이에 **판매가격 경쟁 유도해 소비자가 더 싸게 농약 구입**
- 판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개별상품에 실거래 가격 표시**,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을 고려, **개별상품에 실제 판매가격 표시가 어려울 경우 진열장 하단게시판 등에 가격 게시**

[판매가격표시제 제대로 안 지켜]

- 현장에서 판매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보니 **구입한 농약의 가격이 적당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게 농업인들의 불만
- 같은 품목이라도 **판매상과 판매시기 등에 따라 가격차** 발생, 실제 **판매가격표시제를 잘 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더욱 혼란

[농진청 국정감사(10.17일) 관련 내용]

- (신성범 의원) 지역에서 농업인들의 불만 자주 접하며, 이와 같은 혼란 방지 및 안정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위해 **출고할 때 농약병 등에 가격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김영록 의원)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농업인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선책 마련** 요구
- (이양호 농진청장) **판매가격표시제 강화** 혹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 제도입 여부에 대해 **농업인단체·업체 대표, 관계부처 등과 협의** 고려

자료 : 농민신문(2013.10.23.)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잠정결과

※ 본 자료는 2013년 10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기준 농어업법인 조사 잠정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조사목적]** 농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수산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용어 정리>

-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창설한 조직
-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
- 출자자 공동운영: 출자자들이 경영에 공동참여(노동력제공)를 하며 운영하는 형태
-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중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 출자자 개별운영: 출자자 각자 별도 운영하여 이윤분배 없이 명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 상근출자자: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출자자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출자자가 아닌 일반인)
-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월 말 기준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경영경지면적: 조사 기준연도 12월 말에 법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지면적

□ 조사결과

- **[농업법인수]** 12,981개, **전년대비 19.5% 증가**
 - 실질 운영 법인(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은 11,747개로 전체의 90.5%, 전년대비 21.2% ↑

- **[사업유형]** 유통판매와 기타사업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의 비중 증가**
 - (사업유형별 구성비)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이 32.4%, 유통판매(25.6%), 가공판매(18.6%) 순
 - (전년대비 비중) 유통판매(1.0%p), 기타사업(1.0%p), 농업서비스(0.6%p)는 증가하였으나, 농업생산(2.7%p)은 감소
- **[종사자수]**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80,330명, **전년대비 20.1% 증가**, 반면 **법인당 종사자수**는 6.8명, **전년대비 1.4% 감소**
 -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법인 63.5%, “5~9인” 법인 25.5%
- **[법인당 경지면적]** 11.7ha, **전년대비 11.4% 증가**
 - ※ 2012년 말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1,730천ha)의 25% 차지
- **[정부보조금 수혜법인]** 5,494개(46.8%), **전년대비 31.1% 증가**
 -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 390.2백만 원, 전년대비 3.1% ↓
- **[정부융자금 수혜법인]** 1,114개(9.5%), **전년대비 19.5% 증가**
 - (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 564.2백만 원, 전년대비 4.2% ↓
- **[판매(매출)액]** **농업법인의 판매(매출)액**은 17조 985억 원, **전년대비 18.7% 증가**, 반면 **법인당 판매(매출)액**은 14억 6천만 원, **전년대비 2.1% 감소**
 - (농업생산수입) 4조 955억 원, 전년대비 8.1% ↑
 - (농업생산이외 수입) 13조 30억 원, 전년대비 22.4% ↑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